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각 계약체결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방식	요 건
수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경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지명경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0억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3조 [협력지원]

- ① 당사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공유 System을 구축하되 신규 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사 관리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② 당사는 협력사의 자금, 구매,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동반성장추진팀을 조직하고,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제4조 [서면의 사전발급]

- ① 당사는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5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에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⑥ 가능한 경우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제6조 [명확한 납기]

- ①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7조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8조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②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사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⑤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⑥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⑧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9조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반품처리]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제10조 [계약 해제·해지]

- ①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협력사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② 최고 없이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협력사가 해산, 영업을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계약해제·해지에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협력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력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기술자료 예치제도]

당사는 협력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 미발급 금지]

① 당사는 계약체결시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서면을 보존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름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8.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3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당사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 [구두에 의한 부당행위 금지]

당사는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① 당사는 부당하게 협력사의 경영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16조 [추가공사비 반영]

① 당사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3.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제17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① 당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시 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한 비용은 하도급대금에 반영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8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① 당사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19조 [전속적 거래 요구행위 금지]

당사는 협력사로 하여금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금지]

당사는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제22조 [단가 인하시 사전 협의 및 서면발급]

당사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제23조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당사는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제24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① 당사는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

- ⑦ 당사는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⑧ 당사는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부당 반품 금지]

- ① 당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될 경우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일 경우 이를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이미 수령한 물품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할 경우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⑦ 당사는 협력사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부당 대금감액 금지]

- ① 당사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는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⑦ 당사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⑧ 당사는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⑨ 당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 ⑩ 당사는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⑪ 당사는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⑫ 당사는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⑬ 당사는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⑭ 당사는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① 당사는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③ 기타 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제28조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전가 금지]

당사는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부당 대물변제 금지]

당사는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보복조치 금지]당사는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31조 [탈법행위 금지]

- ① 당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금지]

-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①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사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②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